

[별첨]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주권당		
정책번호 1	윤석열 대통령 탄핵	분	야* 정치
<p>○ 목 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함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탄핵 추진 사유를 여론화하고 정당을 설득, 견인</p> <p>① 탄핵 사유 1. 검찰 독재 민주 파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한 불공정 편파 수사로 정적 제거 정치에 몰두함. -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, 국회 입법에 대한 과도한 거부권 행사로 정치를 파괴함. - 국민을 '입틀막'하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등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심각히 저해함. <p>② 탄핵 사유 2. 당무 개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▲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 축출 ▲ 김기현 전 국힘당 대표 선출 개입 ▲ 공천 빌미로 한 태영호 압박 ▲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▲ 김기현 총선 불출마 종용 ▲ 한동훈과의 갈등 등 빈번히 자행했음. <p>③ 탄핵 사유 3. 삼권분립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윤석열 정권이 제삼자 변제안으로 개입. <p>④ 탄핵 사유 4. 수사 외압</p>			

-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를 제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에 외압 행사.

⑤ 탄핵 사유 5. 독도 포기 외교

-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도 제대로 수호하지 않음.
- 독도 영유권을 공식 주장한 일본의 3대 안보 문건에 지지를 표명함.
- 군 장병 정신전력 교재 개정에서 독도 삭제·분쟁 지역 기술.
-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'재외'로 표기.

⑥ 탄핵 사유 6. 이태원참사에서 국민을 구조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함.

⑦ 탄핵 사유 7. 양평고속도로 의혹

- 윤석열 정권이 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직권을 남용해 무리하게 변경하여 사익을 추구하려 한 의혹.

⑧ 탄핵 사유 8. 전쟁 위기 고조

- 대결 지속 시 한반도 핵전쟁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공격적인 남북 대결 정책을 무책임하게 지속하여 평화 통일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였음.

⑨ 기타 : 대통령실 졸속 이전, 천공 등 국정농단 의혹 등

○ 이행기간

- 22대 국회 개원 즉시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주권당		
정책번호 2	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특검	분	야* 정치
<p>○ 목 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자를 모조리 처벌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22대 국회에서 특검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은 테러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시도임. - 정치테러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시도가 재발할 것임. -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어서 수사 축소·은폐 의혹이 나오고 있음. - 국회가 나서서 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함. <p>① 사건 축소·은폐 의혹 1. 경찰, 사건 직후 현장 보존 대신 물청소. 대테러상황실에서 경미한 사건으로 오도하는 문자 발송.</p> <p>② 사건 축소·은폐 의혹 2. 경찰, 범인이 만난 사람, 사용한 핸드폰, 머무른 숙소, 이용한 택시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열흘 만에 단독범이라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함.</p> <p>③ 공범 존재 의혹 : 범인은 사건 전날 여러 사람과 접촉하였으며 차량을 얻어 타고 모 모텔이 있는 건물에 내렸다가 일을 본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숙박한 것으로 보임. 사건 당일 택시 이용 시 목적지 주소가 적힌 문자를 보여주었다고 함.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함.</p> <p>○ 이행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2대 국회 개원 즉시 			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주권당		
정책번호 3	한반도 전쟁 방지 입법	분 야*	국방, 통일외 교통상
<p>○ 목 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회 권한을 이용해 한반도 전쟁 방지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·미·일 연합훈련 중지법과 미국 전략자산 반입 금지법 제정.</p> <p>① 한·미·일 연합훈련 중지법 제정</p> <p>- 외국 군대와의 연합훈련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. 특히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북한 선제타격, 전면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남북 적대 긴장과 군사 갈등을 심각히 고조시킬 수밖에 없음. 또한 연합훈련 시 중요 무장 장비들과 병력이 집결됨.</p> <p>② 미국 전략자산 반입 금지법 제정</p> <p>- 전략자산을 반입하면 당장 핵 및 그에 준하는 공격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에 심각한 군사 긴장이 조성됨.</p> <p>○ 이행기간</p> <p>- 22대 국회 개원 즉시</p>			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주권당		
정책번호 4	제2반민특위로 검찰·언론독재 청산	분	야* 정치
<p>○ 목 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찰개혁, 언론개혁 단행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반민주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, 범죄자 조사 및 처벌</p> <p>①해방 이후 국회서 친일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친일 청산 시도한 바 있음. 반민특위는 특별 조사위원회·특별 검찰부·특별 사법부로 구성되어 수사부터 기소, 판결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였음.</p> <p>② 현재 한국 사회는 검찰-경찰-사법부 등이 기득권 세력으로 연합하여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음. 공정한 수사·기소·재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개혁, 언론개혁을 실행하기 매우 어렵고 더딤.</p> <p>③ 국회가 반민주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·별건 수사·증인 회유·편파 수사·사건 은폐 등 반민주 범죄와 언론의 부수조작·가짜뉴스·왜곡 보도·불공정 편파 보도 등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과 처벌이 단행되어야 함.</p> <p>○ 이행기간</p> <p>- 정권 교체 직후</p>			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주권당		
정책번호 5	기본소득, 기본주택 실시	분 야*	재정경제, 보 건복지, 건설 교통
<p>○ 목 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소득 실시 - 국민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주택 실시</p> <p>① 무주택자에게 조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제공 * 현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 기준 등이 있어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이 다수임.</p> <p>② 기본주택 확대를 주요 부동산 기본 정책으로 수립.</p> <p>○ 이행기간 - 22대 국회 임기 내</p>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<p>- 사회적 협의를 통해 기본소득 금액 및 기본주택 추진 규모를 산출. - 국토보유세 도입. - 부자에 대한 감세 혜택 축소. - 남북 경제협력 추진 시 기본소득세 적용.</p>			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주권당		
정책번호 6	국공립대 통합 및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	분	야* 교육
<p>○ 목 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격차 및 그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완화함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공립대학의 비중과 경쟁력을 적극 향상함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공립대 통합 및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시행.</p> <p>- 현재 교육은 지나치게 입시경쟁화되었고, 대학 진학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과도하게 진행되었음. 교육이 기득권들의 세습 도구로 전락함.</p> <p>①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대학별 서열화를 완화함.</p> <p>-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졸업시 동일한 학교명의 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대학 간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음.</p> <p>② 국공립대에서 먼저 대학 무상교육 시행함.</p> <p>-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하고 국공립대 진학 선호도를 높임.</p> <p>③ 국공립대 집중 육성으로 경쟁력 향상</p> <p>- 국공립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여 국공립대의 경쟁력, 신뢰도, 선호도를 대폭 향상시킴.</p> <p>④ 사립대 통제 및 국공립대로 비율 상향.</p> <p>- 현재 한국 대학 교육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.</p> <p>- 국공립대에 대한 무상교육, 집중 투자를 실시하며 이를 기초로 사립대의 국공립대 전환을 도모.</p>			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주권당		
정책번호 7	노인·영유아·아동·고아·장애인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돌봄제 추진	분	야* 재정경제, 보건복지, 건설교통
<p>○ 목 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돌봄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짐.</p> <p>- 돌봄은 사람이 살아가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.</p> <p>- 출산 및 육아, 아픈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, 노인에 대한 돌봄 등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나 고단한 돌봄노동, 경력단절, 커다란 경제적 부담 등이 수반됨. 출산을 기피하고 생존 불안을 야기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임.</p> <p>- 돌봄을 개인에게 온전히 맡겨두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감당키 어려운 희생과 부담을 지우게 됨.</p> <p>- 이에 돌봄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국가가 지는 방향에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돌봄 영역을 계획성 있게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함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정 대책 및 장기 계획을 연구·계획 수립·공론화함.</p>			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주권당		
정책번호 8	최저임금 1만 2천원에 국가보조 4천원으로, 소상공인과 알바 노동자의 상생	분	야* 노동
<p>○ 목 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국민의 생활을 향상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최저임금 1만 2천원으로 인상, 소상공인에 대해선 4천원 국가 보조</p> <p>- 소득 격차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임.</p> <p>-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7년이 지난 지금도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함.</p> <p>-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임. 자영업자 대 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음.</p> <p>-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대폭 향상하여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는 노동자의 삶을 시급히 향상.</p> <p>-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를 과감하게 지급하여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생을 도모함.</p>			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주권당		
정책번호 9	군사작전권 즉시 환수, 전쟁 완전 종식	분 야*	국방, 통일외 교통상
<p>○ 목 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군사주권을 환수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결정권을 회복하여 정상국가화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여 평화 실현 안보 정상화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즉각 환수</p> <p>- 군사주권은 국가가 국민, 주권,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주권임.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시 미국에게 이양한 후 74년이 넘도록 군사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. 안보 상황을 온전히 통제하고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함.</p> <p>-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결정한 바 있음. 그러나 그 이후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면서, 조건 미충족을 사유로 지속해서 지연되고 있음.</p> <p>- ‘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’는 것은 전형적인 식민 논리임. 조건 없이 군사주권을 즉각 환수해야 함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전쟁 종료 의사를 천명하고 남북 종전선언 및 평화협상 추진</p> <p>- 군사주권 확보는 전쟁 유발 아닌 평화 실현으로 이어져야 함.</p> <p>- 평화 실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전쟁상태를 끝내는 것임. 전쟁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 실현은 어불성설임.</p>			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주권당		
정책번호 10	소속 의원 월급 300만원 등 기득권화 방지	분	야* 정치
<p>○ 목 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속 국회의원의 특권화, 기득권화 방지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회의원, 보좌진, 당직자 월급을 최대 300만원으로 하고, 나머지는 특별당비로 납부할 것을 권고</p> <p>- 국회의원, 보좌진, 당직자 등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같은데, 고액 월급과 특권이 국회의원 등에게 집중되어 있음. 이는 국회의원 등이 특권화, 기득권화를 조장하는 온상임.</p> <p>- 국회의원, 보좌진, 당직자들이 300만원 수준(노동자 평균임금 수준)으로 하고 초과분은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데 사용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원 활동 집단 운영</p> <p>- 의원 활동은 의원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당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전환.</p> <p>- '의원, 보좌진, 전문가'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활동하며 함께 책임짐. 당원이 의정활동을 지도, 감독.</p> <p>- 의원 활동 감독 기구를 두어 국회의원 활동을 깊이 있게 진단, 평가하고 활동을 잘 하도록 지도.</p>			